

특집 · 양계산업 현황과 흐름

» 동물복지 축산 필요성과 과제

국내 축산 상황 고려한 인증 필요



양 철 주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친환경축산사업단 단장

1. 필요성

유럽에서 시작된 동물복지에 관한 문제가 지금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인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을 기리면서 이날을 세계 농장동물의 날로 정하고 1983년부터 해마다 이를 기념해 오고 있고 세계 농장동물의 날은 농장동물의 고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그리고 동물단체 케어 등은 2015년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가축이 고기생산을 위해 배터리 케이지나 스톤에 감금되고 좁은 공간의 사육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도축전에 절식되는 배고픔 속에서 죽음을 맞는 가축들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물의 고통과 배고픔을 함께 나누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자 1일 단식을 제안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였다.

2014년 세계 농장동물의 날에는 96개국에서 12,437명의 시민들이 1일 단식에 참여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레스토랑 두 곳은 아예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등에 소재한 세계 20여개 도시에서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

다. 농장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금년에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한국의 동물단체가 연대하여 농장동물의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로 국민 일일단식을 제안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구하였다.

1) 축산업계는 공장식 축산을 지양하고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농장형태로 전환하라.

2)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공장식 축산의 상징인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의 스톤 사육부터 금지하라.

3) 소비자는 과도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복지 축산물을 이용하는 대안적인 식탁으로 농장동물의 고통을 줄이는데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도 동물단체의 주장과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소비자이 정말로 원하는 축산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점으로 우리는 동물복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2. 축산의 현실

1970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36.4kg이었지만 2013년에는 67.2kg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70년 국민 1인당 5.2kg의 고기를 먹던 한국의 육류 소비는 2013년 1인당 무려 42.7kg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유와 계란을 합칠 경우 127kg으로 쌀 소비량의 2배정도가 된다. 이러한 축산물 소비의 증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키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데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 국가들은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가 약 100억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계의 식량부족에 따른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축산업은 위축되면서, 동물성 단백질은 더욱 부족하여 미래에는 야생동물과 쥐와 같은 동물이나, 일부 식용곤충까지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냉엄한 현실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는 약 50개국 이상과 FTA가 발효 및 타결이 되었고, 현재 협상중이거나 협상진행중이 나라를 모두 합치면 약 91개국으로 확대되어 경제력을 갖춘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가 추진된다. FTA대상국들의 상당수가 축산선진국이어서 저가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는 고기가 많지 않고 비싸서 먹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고기의 품질보다 안전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고, 동물복지에도 관심이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가의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으로 우리 축산물의 친환경축산과 축산물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인증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축산은 아직까지 제도의 보완, 정부지원, 홍보 그리고 국민의식 개선 등 동물복지 축산이

특집 · 양계산업 현황과 흐름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문제점

소비자가 생각하는 축산은 가축들이 들판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풀과 사료를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축산현실은 밀집사육으로 인해 질병발생 및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욱 건강, 환경 그리고 식품안전성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에 관심을 갖고 현재는 점차 확산 일로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안전하며, 면역력이 높아 질병 감염률이 낮고 일반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많아서 면역력이 낮고,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품질은 우수하고 일반 사육형태의 축산물의 품질은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필자의 산란계 실험결과는 동물복지 축산이 일반축산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실험결과의 예로 동물복지 축산이 가축의 자유로운 행동을 늘리고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산란계의 계란의 크기가 작고 난황의 색이 진하지 않고 생산비를 높이는 단점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산란계 35개 농가가 인증을 받아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10개, 2014년 13개, 2015년 6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인

표 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취소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건수

년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소 건수	인증기관 행정처분 건수
2008년	2,114건	5건
2009년	2,811건	4건
2010년	5,502건	5건
2012년	-	14건
2013년	5,729건	14건
2014년	6,739건	28건

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년간 인증농가의 수가 64 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돼지는 3농 가이고 육계는 단 1개 농가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동물복지 인증을 시행한지 4년이 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농가가 총 68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농가들의 불만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관련 규정과 기준이 축산업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으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게 인증을 받아도 유통으로 연결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인증기관의 수익만 늘리고 축산농가와 정부의 비용만 축낸다는 농가의 불만이 커서 오히려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취소 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실적 위주와 민간 인증기관들이 영리 위주의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이 많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취소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건수를 나타내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축산은 이제 과거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관행축산에서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은 우리나라 축산실정에 맞게 “한국형 동물복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축산선진국과 같이 넓지 않고 가축의 방목여건이 부족한데다가 환경부에서는 현재 가축의 방목을 오히려 불법사육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을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인증의 신청농가수가 많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인증기준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럽 등 축산선진국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농가의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한국의 축산업 실정에 맞추어 이 기준적용에 문턱을 낮추고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진입을 확대, 유도한 후 점진적으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기간도 인증센터의 편의위주로 시행하지 말고 원래와 같이 2년으로 환원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인증센터의 검사원이 매년 농가의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위법 시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비용, 시간, 노력을 절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매년 급속하게 줄어드는 축산농가 수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다자간 FTA에 따른 축산물의 세계 경쟁체제에서 우리의 축산업이 지속발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 안전 축산물이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축산물과 경쟁하여 발전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양계